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수검기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정태호
	담당부서 (과)	혁신기획재정담당 관		직급	사무관
	국장	유재훈		연락처	02-2100-2782
	과장	진선영		이메일	mofa_2080462@mail.go.kr

2021. 05. 0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수검기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규제조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위임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5.24 ~ 2021.07.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설치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금감원 검사수검기관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으로 충당</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어서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 바 개선 필요</p> <p>① (감독분담금 납부상한) 감독분담금 납부상한을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0.15%)로 규정하는 현행 방식은 자기 자산이 아닌 고객자산을 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의 분담료 상한을 과소 평가</p> <p>② (분담금 환급기준)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편성 · 징수되는 문제 발생</p> <p>③ (추가분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 '14년부터 금융위 고시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을 근거로 금융사고 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패널티 성격의 추가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가 불명확</p>		
	7.규제내용	<p>(1) 집합투자재산 관련 감독분담금 상한 현실화 (개정안 제12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분담금 상한의 준거지표로서 금융회사의 총자산 기준 외에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기준을 추가함 ○ 금융회사 분담료 상한을 '총자산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중 큰 금액'으로 변경 *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1:5)은 지배구조법 사례 준용 <p>(2) 감독·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개정안 제12조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의 수지차액 중 '수입 초과액(수입결산-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 불용액(수입예산-지출결산)’만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에 안분하여 환급 <p>(3) 추가분담금 징수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 제12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 동 개정규정을 근거로 분담금징수규정에서 추가감독분담금(=추가분담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약 5,900여개 금융기관 중 면제대상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회사 (21년 기준 494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td>금융회사</td><td>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회사(20년말 기준 5983개) 중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21년 기준 494개)</td></tr> <tr> <td>이해관계자</td><td>증권발행기관</td><td>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등 각종 증권발행기관 (20년 기준 481개)</td></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회사(20년말 기준 5983개) 중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21년 기준 494개)	이해관계자	증권발행기관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등 각종 증권발행기관 (20년 기준 481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회사(20년말 기준 5983개) 중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21년 기준 494개)									
이해관계자	증권발행기관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등 각종 증권발행기관 (20년 기준 481개)									
	9.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p>(1)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담 완화 및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의 도입 취지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시행시, 감독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의 분담금 부담이 약 94억원* 감소(2,336억원 → 2,242억원, '20년 납부액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 1사당 납부액 약 1,903만원 감소 - 발행분담금 등 다른 수입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감독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분담금 금액의 법적 산출근거인 차액 보전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 가능 <p>(2)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분담금 부과비중의 형평성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감독인력 투입 대비 지나치게 작은 분담금을 납부하던 자산운용사의 부담액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권 간 부과비중의 형평성 개선 <p>(3)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적 정당성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침묵적 행정처분임에도 명확한 상위법령 근거 없이 운영되었던 추가감독분담금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감독 행정의 법적 정당성을 보완하고 피규제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68,111.58	68,111.58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영향 미미		영향 미미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 동 규제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입예산 성립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규제일물 설정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업무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규제 성격상 일물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적용대상 아님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68,111.58	68,111.58	0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분담금) ① ----- ----- ----- ----- 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합계액의 1만분의3 중 큰 금액의 ---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및 채무건전성 악화·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 유발의 정도 등---.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이하 이 항에서 “감독분담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납부

현행	개정안												
	<p><u>계산한 금액을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u></p> <p><u>가. 감독분담금 납부 기관에 대한 반환액</u></p> <table border="1"> <tr> <td>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td><td>×</td></tr> <tr> <td>감독분담금 - 제1호의 금액</td><td></td></tr> <tr> <td>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td><td></td></tr> </table> <p><u>나. 발행분담금 납부 기관에 대한 반환액</u></p> <table border="1"> <tr> <td>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td><td>×</td></tr> <tr> <td>발행분담금</td><td></td></tr> <tr> <td>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td><td></td></tr> </table>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	×	감독분담금 - 제1호의 금액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	×	발행분담금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	×												
감독분담금 - 제1호의 금액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													
수지차익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	×												
발행분담금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제1호의 금액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설치법(§46, §47)에 따라 금감원 검사수검기관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으로 충당
 -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검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징수(법 §47)하며, 매년도 금감원의 총지출예산에서 타 수입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차액부과방식)
 - 발행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증권발행심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증권발행기관으로부터 징수(자본시장법 §442)하며, 증권종류별로 사전에 책정한 부과요율을 부과(=정액부과방식)
- 그러나,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어서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 바 개선 필요
- ① (감독분담금 납부상한) 감독분담금 납부상한을 총자산 대비 일정 비율(0.15%)로 규정하는 현행 방식은 자기 자산이 아닌 고객자산을 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의 분담료 상한을 과소 평가
 - *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 · 투자일임업자(일임재산) · 신탁업자(신탁재산) 등
 - 07년 이후 간접투자시장의 성장으로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고객 자산 수탁고가 급증*하고, 금감원 감독수요도 상당**해진 반면,
 - * 집합투자 · 일임 수탁고(조원) : (08말)531 → ('20말)1,201
 - ** 권역별 금감원 감독 · 검사 투입인력(명, '20년) : (은행)223 (보험)234 (증권)105 (여전)82 (자산운용)69 (저축은행)53 (상호금융)47
 - 총자산 기준의 상한책정 방식 등으로 인해 감독분담금 납부액*은 다른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작아지는 문제점 발생
 - * 권역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억원) : (은행)1,218 (보험)800 (증권)531 (여전)112 (상호금융)65 (저축은행)36 (자산운용)8

② (분담금 환급기준)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이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편성·징수되는 문제 발생

* 발행분담금 수입은 자본시장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수입결손을 피하기 위해 수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

→ 연도별 발행분담금 초과징수액(억원) : (‘17)207 (‘18)234 (‘19)314 (‘20)353

○ 과다징수된 분담금은 결산시 반환되지만, 현행 환급기준 하에서는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충분한 반환액이 할당되지 않음

- 수지차익은 크게 ①수입 초과(수입결산-수입예산)로 인한 부분과 ②지출 불용(수입예산-지출결산)을 통한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 현행 산식 하에서는 수입초과액과 지출불용액 모두를 감독·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안분하기 때문

③ (추가감독분담금 징수) ‘14년부터 금융위 고시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을 근거로 금융사고 유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대해 추가분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가 불명확

*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 §3의2 ④ 원장은 직전사업연도 중 재무 건전성악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에 한한다) 실시로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1%(평균 +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검사대상 기관별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금융위법 시행령(§12②)은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금융위 고시로 위임하고 있으나,

- 분담요율 결정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부재 (→총부채 및 영업수익만 고려요소로 명시)

⇒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분담금징수규정에서 추가분담금 징수 근거를 창설하고 있는 바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감독·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유지
	내용	①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을 검사대상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로 유지 ②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지차익(수입결산-지출결산) 전체를 감독·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안분하여 환급 ③ 추가감독분담금 징수를 위한 시행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규정을 통해 구체적 징수근거 창설
규제대안1	대안명	감독·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내용	①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을 검사대상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중 큰 금액으로 함 ○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1:5)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사례※ 준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소규모 금융투자회사의 기준(시행령 §6③)> ①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면서, ②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 (⇒ 총자산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치 비율이 1:4) </div> ② 금감원의 수지차액 중 '수입 초과액(수입결산-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 ○ '지출 불용액(수입예산-지출결산)'만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에 안분하여 환급 ③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 ○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규제대안2	대안명	감독·발행분담금 부과체계를 개편하되, 환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
	내용	① 감독분담금 부과액 상한을 검사대상금융기관별 '총자산액의 0.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 합계액의 0.03%' 중 큰 금액으로 함 ②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지차익(수입결산-지출결산) 전체를 감독·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안분하여 환급 ③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 ○ 금융회사별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검사 유발 정도"를 추가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의 경제적 편익에 변동이 없는 바 법적안정성 유지 가능	○감독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이 발행분담금 납부대상 기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불균형 지속 ○자산운용사가 지나치게 낮은 금액만을 부담하는 등 감독 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 지속 ○추가감독분담금을 명확한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징수하여 법적 타당성이 미흡한 상황 지속
규제대안1	○감독분담금 납부기관과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간의 징수액 형평성 제고 가능 ○자산운용사의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금감원 감독수요에	○발행분담금을 납부하는 일반 상장법인, 자산운용사 등의 최종 부담액이 현행대비 증가* * 다만, 발행분담금 납부회사 1사당 부담증가액은 연간 1,950만원 수준

	<p>상응하여 상향하는 등 금융업권 간 감독분담금 납부액의 형평성 제고 가능</p> <p>○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적 타당성 확보</p>	<p>으로 총 증권발행조달금액('20년 339조원)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p>
규제대안2	<p>○ 자산운용사의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금감원 감독수요에 상응하여 상향하는 등 금융업권 간 감독분담금 납부액의 형평성 제고 가능</p> <p>○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침익적 행정처분의 법적 타당성 확보</p>	<p>○ 감독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이 발행분담금 납부대상 기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불균형 지속</p>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p>검사대상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등 20여개 업권별 협회)</p>	<p><제도개선 방안 설명 공청회 개최(2021.4.30.)></p> <p>○ 금융투자협회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시 집합투자증권을 다량 발행하는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부담이 어느정도 증가하는지 문의</p> <p>⇒ (금융위 답변) '20년도 최종징수된 집합투자증권 발행분담금은 약 14.2억원으로, 제도개편시 징수액이 약 +1.5억원 증가* 전망</p> <p>* 자산운용사 1사(총 244개 등록)당 부담증가액은 연간 약 62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임을 설명</p>	<p>업계협의결과 별도 이견없는 바 원안대로 유지</p>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 대안1을 선택할 경우 규제편익이 극대화되는 반면, 규제에 따른 비용증가 정도는 다른 대안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므로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규제편익)

- (i) 감독분담금 납부 금융회사 부담 감소 : 종래 과도하게 부담하던 분담금 금액을 환급기준 개편을 통해 추가로 환급받게 되면서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회사의 부담액이 약 △94억원 감소 ('20년 부과액 기준)

⇒ 1사당 연간 약 1,900만원 감소('21년 부과대상 494사 기준)

- (ii) 금융회사 간 감독분담금 납부형평성 제고 : 감독수요에 비해 과소한 금액을 부담하던 자산운용사의 부담액이 일부 증가*하는 대신,

* 자산운용사 부담액 증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접효과는 아니며, 시행령과 함께 개정 추진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나타나는 효과임

- 증권사 등 감독수요 대비 과도한 비용을 납부하던 금융회사의 부담액은 감소하여 금융회사 간 납부형평성 개선

<제도 개선시 금융투자 권역 내 감독분담금 납부액 변화 전망>

구분	금감원 투입인력('20년)	분담금 납부액(현행)	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	분담금 납부액(개선)	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
자산운용사	69명	7.6억원	0.11억원	15.9억원	0.23억원
증권사	105명	530.9억원	5.06억원	465.6억원	4.43억원

- (iii) 금융회사의 추가감독분담금 납부부담 감소 : 추가감독분담금 납부의 시행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법령을 통해 추가감독분담금 납부가능성을 명확히 인지 가능해짐*

* 아울러, 함께 개정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 감독분담금 부과액의 규모 또한 대폭 감소하게 돼 명시적 비용감소 효과 발생

- (규제비용) 공모증권 발행 상장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지만, 부과 정당성 및 1사당 부담액 증가규모 등 고려시 규제비용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

- (i)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비용 : 연간 증권발행액('20년 339조원) 대비 발행분담금 증가액(94억원) 비중을 환산하면,

- 비용증가폭은 증권 10억원 발생시 약 28,000원 수준으로 매우 미미
- (ii) 자산운용사 비용 : 연간 당기순이익 합계액('20년 13,320억원) 대비 감독분담금 증가액(8.3억원) 비중을 환산하면,
 - 비용증가폭은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비 약 62만원으로 매우 미미

3. 규제목표

①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 납부기관 간 납부형평성 제고

-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분담금 납부기관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문제를 보정
 - 예산편성시 과다징수된 감독분담금을 결산 단계에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온전하게 환급하여 징수액의 형평성 개선

②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납부형평성 제고

- 각 금융업권별로 투입되는 금감원 감독·검사 인력투입량에 상응하여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이 결정되도록 하여 금융업권 간 부담액의 형평성 개선

③ 추가 감독분담금 징수의 법적 타당성 개선

- 침익적 행정처분인 추가 감독분담금의 징수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유보 원칙 구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① (규제목적1 : 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제고)

- (규제수단) 발행분담금의 과소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환급제도 폐지’*와 같은 급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과소징수되는 부분만큼만 환급액을 감소시키는 핀포인트 규제를 채택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한국금융학회)을 수행('19년)한 바 있으며, 동 연구용역은 “발행분담금은 서비스단가가 정해진 정률수수료인 바 환급제도를 폐지하는 대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함

- (비례적 타당성 평가) 규제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규제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바, 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

② (규제목적 2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제고)

- (규제수단) 자산운용사의 감독분담금 부담액 상한으로 총자산 대비 일정비율 대신 자산운용수탁고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되,

- 적용비율은 총자산 기준(1만분의15)보다 낮은 1만분의3을 적용하여 분담금 상한액의 급격한 증가 여지를 최소화

- (비례적 타당성 평가) 감독수요에 비례하는 분담금 상한 설정이라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되, 규제수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한 바 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

③ (규제목적 3 : 추가감독분담금 징수의 법적근거 명확화)

- 이미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추가감독분담금에 대하여, 규제수단의 강화* 없이 징수의 법령상 근거만 명확히 함

* 시행령과 함께 개정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에 따라 추가감독분담금 부담수준은 과거 대비 감소 예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영향 미미	영향 미미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자산운용사 관련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상한이 상승하지만, 동 규정만으로 실제 부과되는 분담금 부담액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 간 경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감독분담금 징수액 감소는 금융회사 일반에 경제적 편익, 발행분담금 징수액 증가는 증권발행법인 일반에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킴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내에서 어떤 특정한 회사 및 업권에 대해서만 경제적 편익이나 비용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일반에 균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 (자산운용사 관련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상한이 상승하지만, 동 규정만으로 실제 부과되는 분담금 부담액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중소기업이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드물고, 발행하더라도 금번 제도개편에 따른 발행분담금 비용증가는 증권발행액 10억원당 약 28,000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
 - 금번 제도개편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이미 금융업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그 반대급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경쟁·진입 제한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일몰설정 여부

- 분담금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매 회계연도 수입예산 성립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분담금 제도에 대하여 규제일몰 설정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업무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규제 성격상 일몰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이미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독 분담금과 관련한 규제이므로 신규 시장진입 추진자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과는 무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분담금 납부권역의 구분) 한국의 경우 금융영역을 크게 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3개 대권역으로 나누는 반면(시행령 §12), 영국·호주·독일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금융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

* (예) 영국 FCA : 총 24개(보험 내 생보/손보, 금투 내 증권/자산운용 구분)
 독일 Bafin : 총 6개(자산운용을 별도업권 구분, 증권(IB)은 은행(CB)과 통합)
 호주 APRA : 총 8개(보험 내 생보/손보/연금 구분, 자산운용(신탁, 기금) 구분)

⇒ 이는 각 금융업권별 감독당국 투입인력에 따라 분담금 납부금액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규제개선 취지인 ‘금융업권 간 분담형평성 제고’는 해외 감독당국의 정책목표와도 부합

- (감독분담금의 부과기준) 한국의 경우 총자산(시행령), 총부채 및 영업수익(금융위 고시)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분담금을 배분하는 반면, 영국·호주·독일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 금융업권별 감독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담금 부과기준을 혼용

⇒ 특히, 영국·독일 등에서도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금번 규제개선 방향과 동일하게 ‘자산운용수탁고’를 기준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

<참고 : 주요국 금융감독기구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비교>

구분	권역 간 분담금배분	권역 내 분담금배분
영국 FCA (영업행위 통합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영역을 총 24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여수신 관련 : 예금취급기관, 주택금융기관, 소비자신용기관 등 (ii) 보험 관련 : 일반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증권 발행사, 보험중개사 (iii) 금융투자 관련 : 투자매매·중개·기업금융, 투자신탁·투자회사·자산수탁 ■ 영역별로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기관) 총부채 ■ (대출기관) 대출취급량 ■ (투자매매) 거래량 ■ (자산운용) 운용수탁고 ■ (생보) 보험료(75%)+총부채(25%) ■ (손보) 보험료(90%)+총부채(10%)

구분	권역 간 분담금배분	권역 내 분담금배분
영국 PRA (건전성 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영역을 총 6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생보, 손보, Lloyd 계열보험사, Lloyd 본사, 투자은행(SIFI) ※ SIFI를 제외한 금투회사는 FCA 소관 ■ 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총부채 ■ (생보) 보험료(75%)+총부채(25%) ■ (손보) 보험료(90%)+총부채(10%) ■ (투자은행) 총자산(50%)+영업수익(50%)
호주 APRA (건전성 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영역을 총 8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지주, 생보, 손보, 연금보험, 민영건강보험, 신탁, 기금 ※ 금투회사는 ASIC(영업행위감독기구) 소관 ■ 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기관감독/시스템감독 구분)에 따라 분담금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권역 공통) 총자산
독일 Bafin (통합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영역을 크게 6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CB+IB), 보험, 자산운용, 정리금융, 신용정보, 팩토링·리스 ※ 최소분담금을 내는 기타수검기관 별도존재 ■ 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총자산 ■ (보험) 총보험료수입 ■ (자산운용) 운용수탁고

○ 타법사례

특이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감독·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감독·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8,111.58	68,111.5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68,111.58	68,111.5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발행분담금 납부대상 공모증권발행법인 및 자산운용사 등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지만, 1사당 부담액 증가규모 등을 고려시 규제비용은 미미한 수준으로 피규제자가 충분히 준수 가능함

(i)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비용 : 연간 증권발행액('20년 339조원) 대비 발행분담금 증가액(94억원) 비중을 환산하면,

- 비용증가폭은 증권 10억원 발행시 약 28,000원 수준에 불과해 매우 미미

(i) 자산운용사 비용 : 연간 당기순이익 합계액('20년 13,320억원) 대비 감독분담금 증가액(8.3억원) 비중을 환산하면,

- 비용증가폭은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비 약 62만원 수준에 불과해 매우 미미

2. 규제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초 금융기관이 제출한 업무보고서상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 집행을 위해 별도의 물리적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행정업무만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9.2월~12월, 한국금융학회)

☐ 연구용역 결과 도출 및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20.7월, '21.3월)

* 분담금관리위원회(금융위법 §47②) : 금감원 분담금 요율결정 및 제도개선 심의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심의기구

☐ 제도개선 실무안 마련 및 쟁점업권 실무협의('21.3~4월)

☐ 전업권 대상 공청회 실시('21.4.29일)

☐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1.5월)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위원회는 매년 금감원 예산심의시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수입예산을 심의하면서 분담금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며,
 - 금융회사 간 또는 분담금 납부기관 간 부담수준 및 부과방식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견할 경우 추가제도개선을 진행할 계획

3. 종합결론

- 금번 분담금 제도개선은 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분담금 징수의 법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국회·감사원 및 금융업계에서 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반면,
 -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할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감독·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8,111.58	68,111.5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68,111.58	68,111.5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독·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및 환급체계 개편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발행분담금 납부대상 공시증권 발행법인('20년 기준 총 481개)																																						
활동제목	발행분담금 납부액 증가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68,111,582,48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발행분담금 환급액 감소분('20년도 발행분담금 납부액 및 환급액 기준으로 추산. 10년간 매년 동일액이 감소한다고 가정)(9400000000)																																						
근거설명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에 따라 감독분담금 최종징수액이 연간 △94억원 감소하고, 발행분담금 최종징수액이 연간 +9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20년 징수액 기준 추산) <분담금 환급방식 개선 효과 ('20년 결산기준, 단위:억원)>																																						
	<table><tr><th>구분</th><th>수입예산</th><th>실제수입</th><th>①수입초과 1차 환급</th><th>사후보정 수입예산</th><th>총지출</th><th>②지출불용 2차 환급</th><th>최종징수액 (현행대비)</th></tr><tr><td>발행분담금</td><td>705</td><td>1,058 (+353)</td><td>-</td><td>1,058 (30.4%)</td><td rowspan="3">/</td><td>256×30.4%=78</td><td>980 (+94)</td></tr><tr><td>감독분담금</td><td>2,788</td><td>2,788</td><td>△368</td><td>2,420 (69.6%)</td><td>256×69.6%=178</td><td>2,242 (△94)</td></tr><tr><td>기타</td><td>137</td><td>152 (+15)</td><td>-</td><td>152</td><td></td><td>152</td></tr><tr><td>합계</td><td>3,630</td><td>3,998 (+368)</td><td>△368</td><td>3,630</td><td>3,374</td><td>△256</td><td>3,374</td></tr></table>	구분	수입예산	실제수입	①수입초과 1차 환급	사후보정 수입예산	총지출	②지출불용 2차 환급	최종징수액 (현행대비)	발행분담금	705	1,058 (+353)	-	1,058 (30.4%)	/	256×30.4%=78	980 (+94)	감독분담금	2,788	2,788	△368	2,420 (69.6%)	256×69.6%=178	2,242 (△94)	기타	137	152 (+15)	-	152		152	합계	3,630	3,998 (+368)	△368	3,630	3,374	△256	3,374
	구분	수입예산	실제수입	①수입초과 1차 환급	사후보정 수입예산	총지출	②지출불용 2차 환급	최종징수액 (현행대비)																															
	발행분담금	705	1,058 (+353)	-	1,058 (30.4%)	/	256×30.4%=78	980 (+94)																															
	감독분담금	2,788	2,788	△368	2,420 (69.6%)		256×69.6%=178	2,242 (△94)																															
	기타	137	152 (+15)	-	152			152																															
합계	3,630	3,998 (+368)	△368	3,630	3,374	△256	3,374																																

☐ 직접편익

(정량)세분류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기관('21년 기준 총 494개)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납부액 감소						
편익항목	감독분담금						
비용	68,111,582,488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간 감독분담금 환급액 증가분('20년도 감독분담금 징수액 및 환급액 기준으로 추산, 10년간 불변 가정)(9,400,000,000)						
근거설명	<p>○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에 따라 감독분담금 최종징수액이 연간 △94억원 감소하고, 발행분담금 최종징수액이 연간 +94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20년 징수액 기준 추산)</p> <p><분담금 환급방식 개선 효과 ('20년 결산기준, 단위:억원)></p>						

구분	수입예산	실제수입	①수입초과 1차 환급	사후보정 수입예산	총지출	②지출비용 2차 환급	최종징수액 (현행대비)
발행분담금	705	1,058 (+353)	-	1,058 (30.4%)		$256 \times 30.4\% = 78$	980 (+94)
감독분담금	2,788	2,788	△368	2,420 (69.6%)		$256 \times 69.6\% = 178$	2,242 (△94)
기타	137	152 (+15)	-	152			152
합계	3,630	3,998 (+368)	△368	3,630	3,374	△256	3,374

(정성)세분류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회사																	
활동제목	금융회사 간 감독분담금 납부형평성 제고																	
편의항목	감독분담금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감독수요에 비해 과소한 금액을 부담하던 자산운용사의 부담액이 일부 증가*하는 대신, * 자산운용사 부담액 증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직접효과는 아니며, 시행령과 함께 개정 추진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 나타나는 효과임																	
	- 증권사 등 감독수요 대비 과도한 비용을 납부하던 금융회사의 부담액은 감소하여 금융회사 간 납부형평성 개선																	
	<제도 개선시 금융투자 권역 내 감독분담금 납부액 변화 전망>																	
	<table><tr><th>구분</th><th>금감원 투입인력('20년)</th><th>분담금 납부액(현행)</th><th>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th><th>분담금 납부액(개선)</th></tr><tr><td>자산운용사</td><td>69명</td><td>7.6억원</td><td>0.11억원</td><td>15.9억원</td></tr><tr><td>증권사</td><td>105명</td><td>530.9억원</td><td>5.06억원</td><td>465.6억원</td></tr></table>				구분	금감원 투입인력('20년)	분담금 납부액(현행)	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	분담금 납부액(개선)	자산운용사	69명	7.6억원	0.11억원	15.9억원	증권사	105명	530.9억원	5.06억원
구분	금감원 투입인력('20년)	분담금 납부액(현행)	감독인력 1인당 분담액	분담금 납부액(개선)														
자산운용사	69명	7.6억원	0.11억원	15.9억원														
증권사	105명	530.9억원	5.06억원	465.6억원														

(정성)세분류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회사
활동제목	추가감독분담금 납부의 예측가능성 제고
편의항목	추가감독분담금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p>○ 추가감독분담금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법령을 통해 추가감독분담금 납부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됨*</p> <p>* 아울러, 함께 개정을 추진하는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액 규모 또한 대폭 감소하게 됨</p>